

검찰이 밝힌 '외환은 헐값 매각 드라마'

론스타 '먹튀 각본', 변양호·이강원 주연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매각된 배경에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이 뒤 단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는 론스타의 치밀한 각본과 음모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7일 검찰 수사 결과 최종 확인됐다.

◇'먹튀' 노린 치밀한 로비=검찰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서울은행 인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2002년 7~8월, 브랜드 가치가 높고 해외 영업망을 잘 갖췄으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게 눈독을 들인 이유였다.

작전의 시동은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걸었다. 스티븐 리는 2002년 7월 살로먼스미스바니(SSB) 김도 대표와 재무자문 계약을 맺은 뒤 김씨를 통해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금감원 정책국장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대표와 변국장, 김국장은 모두 경기고 동료. 이십전십이 가능한 사이였다.

스티븐 리는 두 달 뒤 변국장에게 "투자자도는 10억 달러"라고 통보했고 김대표는 변국장을 수차례 만나 론스타가 10억 달러에 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같은 해 10월 론스타는 10억달러로 은행 주식 51%를 매입한 뒤 단계에 제3의 은행에 되팔아 차익을 챙긴다는 "출구(EXIT)"전략을 세웠다. 이른바 '먹튀'작전을 구획화한 것이다.

스티븐 리 치밀한 로비에 넘어가 BIS 비율 조작 론스타에 넘겨줘



11월에 변국장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에게 "론스타의 뜻대로 10억 달러 정도에 인수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때부터 이행장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비를 조작이 본격화됐다. 4월에 접어들어 은행측과 본격적인 가격협상이 시작되자 스티븐 리가 다시 나섰다. 그는 변국장과 친한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변국

장과 은행 주가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은행 주식 가격을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7월15일 변국장이 금감위·금감원·외환은행·론스타 관계자 등을 모아 문제의 '10인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행장은 외환은행이 증자에 실패하면 2003년 말 BIS 전망치가 5.42%로 하락해 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처럼 보고했고 결국 1주일 뒤 부실을 부풀려 2003년 말 BIS 전망치를 6.16%로 왜곡해 금감원에 보냈다.

이어 금감위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과소평가된 BIS 전망치만을 토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예외 승인을 인정해줬다. 1년여에 걸친 론스타의 치밀한 로비와 이에 넘어간 변 국장, 행정직 보장을 원하던 이강원 행정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건설한 은행이 해외 투기 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론스타·변양호·이강원 '손발 척척' =론스타 측에 선 스티븐 리와 유희원씨가 전면에 서 로비를 진두지휘했다. 스티븐 리와 유희씨는 사실상 은행 매각 결정권을 지닌 변양호 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을 카운터파트로 정하고 SSB 김대표와 하종선 변호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했다. 결국 스티븐 리와 유희씨가 변 국장과 이 행정장에 접근했고 세 당사자가 '외환은행의 조기 헐값 매각'이라는 큰 틀에 맞춰 손발을 맞춘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 그레이켄 회장 "의혹만 제기... 증거 없다"

론스타가 7일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었다는 대검찰청의 수사발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9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 결과인 대검찰청의 공식 발표에는 어떠한 새로운 점도 없다"며 "이전과 동일한 모호한 의혹 제기이며 여전히 설득력이 없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자신들과 외환은행 경영진, 금융당국 등이 공모로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고의

로 조작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당시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독일의 코메르츠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은 상업 및 은행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에 프리미엄을 더 한 것으로 헐값 매입 의혹도 근거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현재·진념 혐의 없음 면죄부 받은 '모피아'

재경부의 영문 약자 'MOFE'(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범죄 조직 '마피아'의 합성어인 '모피아'는 전·현직 재경부 관료들의 '비선 라인'을 비호아 부르는 말이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이현재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계에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10월 말부터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전운철 감사원장과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현 경제부총리)을 조사했다. 지난 주에는 수사 초기부터 매각

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은 '이현재 사단'의 좌장격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했다.

재경부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살펴야 하는 경제부총리의 위치에서 은행 매각 건은 실무 국장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전 부총리는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앤K에서 고문으로 몸담고 있었고, 진념 전 부총리는 회계 자문을 맡은 삼정KPMG의 고문으로 일했지만 민간인 신분이라 돈거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경주장 길이 5.684km 아시아 최장 내년 한국인 카레이서 3~5명 선발

전남 F1 서킷 설계도 확정

오는 2010년 전남에서 열릴 F1(포뮬러원) 그랑프리 서킷(자동차 경주용 환상 도로) 설계도가 확정됐다. 또 이 경주에 참가할 한국인 카레이서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F1 한국 대회 운영사인 카보(KAVO)는 7일 경주장 마스터플랜 설계사인 독일 킬케(Tilke)사가 설계한 전남서킷의 최종 코스도를 공개했다. 킬케사는 세팍, 상하이, 터키, 바레인, 후지 스피드웨이 등 1999년 이후 새로 건립되거나 개보수한 F1 서킷의 디자인을 담당할 세계 수준의 전문 기업이다.

새 경주장은 아시아 최장 길이로 전체 길이가 5.684km에 이르며, 시속 350km를 내는 직선 구간이 1.25km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F1 경기장 가운데 가장 길다. 현재 아시아 지역 F1 서킷은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 4.563km, 중국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 5.451km, 말레이시아 세팍 서킷 5.540km, 바레인 국제 서킷 5.412km 등이다.

전남 서킷은 또 길이 3.047km의 상설트랙과 확장 구간 5.684km의 F1 트랙 등 용도에 따라 2개 코스로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하이

브리드형 서킷으로도 설계된다. 기타 시설로 최대 높이 14m의 F1 피트(정비하는 장소) 빌딩, 분부 격인 컨트롤 타워(높이 13m, 3층 구조), 미디어센터, F1팀 빌딩, 주차장, 워터시 설 등이 있다. 이 경주장은 2007년 7월 착공, 2009년 하반기 완공된다.

KAVO는 이와 함께 F1 한국인 드라이버 육



2010년 포뮬러원(F1) 한국 그랑프리 무대인 전남국제자동차경기장(가칭) 코스 조감도.

성 계획도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인 카레이서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3~5명의 후보를 선발한다. 하반기부터는 포뮬러 BMW, F3 등 3년간의 해외 적응기를 거쳐 2010년 경주에 최소 1명의 드라이버를 주전으로 뛰게 한다는 내용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야 3당 의원 발의 'F-1 특별법' 국회 제출

내년 4월 임시국회 처리될 듯

전남도가 2010년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F-1 특별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문광위로 넘어가 심의를 거친 후 법사위 등에서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7일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장흥·영암)에 따르면 F-1 특별법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 의원 51명이 공동서명을 했으며 대표발의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했다.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제출한 만큼 정부와의 협의 및 국회의 과정에서 상당한 탄력이 예상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법안은 경주장, 호텔, 콘도 등 대회관련 시설의 건설과 개최권료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해

공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20년간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 함으로써 예산호 간척지 확보의 길도 열려왔다.

여기에 법안의 목적에 개최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국가는 대회장 인근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최대한 지원토록 함으로써 F-1 대회가 J프 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및 서남권 종합개발구상과 연계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절차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대회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뒀다.

유선호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와 각 당의 의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면서 법안을 성안해 왔다"며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F1 대회와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C-INUS 전대 상영중!
 찾았어 찾는 우리동민의 영화관·세니시티대7개관! 200석의
 대형 녹화시우니가 전대후문 활공상권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064-1528-1121